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

일시 | 2016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주최 |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 특별위원회

〈 프로그램 순서 〉

- 사회 : 장동빈 부위원장(환경연합 총선 특위)
- 인사말
 - 권태선 공동대표(환경연합)
- 환경연합 2016 총선 대응 활동 소개
 - 노진철 공동위원장(환경연합 총선 특위)
- 환경연합 2016 총선 정책 제안 발표
 - 엄형철 사무총장(환경연합)
-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명단 발표
 - 조성오 분과위원장(총선 특위 검증분과)
- 환경연합 총선 대응 향후 활동 계획
 - 백찬홍 분과위원장(총선 특위 홍보분과)
- 퍼포먼스

〈 목 차 〉

1. 보도자료.....	1쪽
2. 환경운동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4쪽
3.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결과 발표.....	30쪽
- 19대 국회 [원전 분야] 검증 결과.....	33쪽
- 19대 국회 [4대강 분야] 검증 결과.....	37쪽
- 19대 국회 [국토생태분야] 검증 결과.....	42쪽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침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3명(새누리당 19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8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낮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

- △ 사고뭉치 원전 달고 안전사회 열자
- △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 △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 △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 △ 짝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평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hjk2722@kfem.or.kr)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I.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독립

II.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III.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 2) 수도권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IV.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 2) 수명지남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V.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VI.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VII. 짝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I. 사고몽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현황과 문제점

1) 원전축소와 탈핵은 세계적 흐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원자력발전을 줄이거나, 탈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탈핵을 선택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의 건설 중단 결정.
-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한국의 원전 개수는 후쿠시마사고 이전 21기에서 24기로 증가. 원전을 늘려나가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원전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있음.

2) 원전공화국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원전마피아와 원전비리

- 2013년 6월 21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2년 5개월간 모두 106건(약식재판 제외)에 대한 원전 비리 재판 분석 결과.(부산지법 동부지원) 현재까지 160명(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재판에 넘겨져 68명이 실형 선고.
- 이들의 형량을 합치면 징역 253년9개월이다. 벌금은 54억8400만원, 추징금은 48억9400만원. 이들의 범죄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피해는 1,939억3000만원으로 추산. 폐쇄적인 운영과 회전문 인사, 원자력발전 중심의 진흥정책 등이 이러한 대규모 비리를 양산해왔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출범운영 중이지만, 엄격하게 진흥부처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한계.

3) 원전이 늘어나면 사회적 갈등은 폭증.

-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음.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됨.
- 원전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 생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에서도 암 발생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사례 보고. 현재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의 548명의 주민들이 갑상선암 피해 소송 진행 중.
- 신규원전 건설 후보지로 지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절대 다수의 (삼척 85%, 영덕 91.7%)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있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원전 등 대형발전소 건설로 인한 초고압송전탑 건설은 밀양과 청도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야기. 엄청난 사회적비용과 지역공동체의 파괴 문제 발생.

2. 정책방향과 비전

- 1)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 2) 원자력발전, 초고압송전탑 등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 3) 원전안전 확보와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3. 정책제안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대안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리는 계획 마련은 필수.
-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 안전 문제가 철저히 검증되지 않고,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신규원전 추진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고, 전력수요가 늘고 있지 않은 전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신규원전추진 전면 재검토 필요.
-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인 신고리5,6호기, 신울진3,4호기 신규원전 추진중단.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전력수급상황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영덕 삼척 신규원전부지 선정 취소.
-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취소 및 폐쇄. 설계 수명을 넘겨 원전 가동 금지, 원자력안전법 개정.
-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원전 폐쇄를 포함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을 위한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 원자력발전소 신규 예정부지로 선정된 삼척과 영덕의 경우, 주민의 다수가 원전유치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반대 의사를 확인함.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년 째 갈등을 반복하고 있음.
- 주민의 피해와 희생이 큰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은 전력공급의 측면에서만 추진되어서는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음.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먼저 추진되고, 이를 위한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이 강요되는 문제 개선 필요.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수립 시 형식적인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창구가 존재하지 않음.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공청회로 진행.
-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입법이 필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위원의 대부분 비상임위원이라 자문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업무파악은 물론 책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원자력발전 주요 운영국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등의 사례처럼,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승인하는 제도 도입.
- 자문위원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비상임위원 중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로 개편. 총 9명의 위원 중 정부추천(총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만 상임위원임. 상임위원을 확대해서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의 지속성,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격 사유와 자격 강화 및 임기연장(현행 3년) 필요.

II.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 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3.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16.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2. 정책방향과 비전

-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해결을 선도해야 함.
- 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를 전환.

3.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현황과 문제점

1) 독 터진 환경규제, 개발의 전령이 된 케이블카

- 이명박 정부로부터 속도를 낸 환경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들어 더욱 가속됨.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 박근혜정부의 창조 경제의 실패 등에 따라 정부의 환경정책은 규제 완화와 토목 개발이 주요 방향이 되고 있음. 이는 국토 정책에서 두 가지 흐름 즉 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엄격히 보전되던 지역을 개발하거나, 도시 내부 또는 주변의 생활 보전을 위해 보호하던 녹지에 대한 전용과 훼손으로 나타남.
-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내에서도 보존가치가 가장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임. 하지만 2012년, 2013년 부결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2014년 10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급작스럽게 진행돼,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됨. 설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무모하게 진행되면서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32개 지역에서 유사 계획이 추진되는 등 이후 케이블카는 지역 난개발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음.

2) 수도권 과밀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수도권 규제완화

-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9.3%, 제조업의 56.9%(2010년)가 집중되어 있음. 이는 일본 도쿄 33.2%, 프랑스 파리 18.1%, 런던 12.4%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임. 이에 따라 전국의 지역 간 도로와 7대도시의 도로상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28조 5천억원에 달하며(2010년), 이는 GDP의 2.43% 규모에 해당. 특히 수도권의 과밀비용이 전체의 60% 이상임
- 지난 18일 박근혜대통령은 개발 수요가 있는 그린벨트 233.5km²를 2년 동안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중 수도권인 경기도는 49.5km²(여의도 면적의 17배).

3) 생물다양성을 위한 세계의 노력

- 우리나라는 2014년 UNCBD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으며, 아이치 타겟(2020년까지 육지 면적의 17%,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함(현재 한국은 육지 10.1%, 육지 1.2% 수준)
- 최근 50년 동안 산림 670만ha에서 636만ha로, 농지는 230ha에서 172만ha로 급격히 감소
- 국내 생물은 4만1천여종('13)인데, 멸종위기종의 지속적인 증가('05) 221종→('12) 246종)와 생물종 서식지의 감소 그리고 외래종 침입과 기후변화 등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음.

2. 정책방향과 비전

1)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관한 개발 공약 금지

- 국가가 보전해야할 책무가 있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평가.감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함.

- 20대 총선이 또 다른 거대 토목사업과 막개발을 공약하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권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을 지켜야 함.

2) 도시의 통합적 재생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 도시계획 체계를 양적개발 및 도시성장 중심에서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및 정비로 전환함에 따라 도시 녹지 확대,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와 농지 보호, 신규 도시 개발의 억제와 구도심의 재생 등의 방향으로 녹지총량을 유지함.
- ‘영국의 도시계획 방침(2012)’은 도심활성화, 지속가능한 교통, 고품질 주택의 폭넓은 선택, 그린벨트보호, 역사자원 및 환경의 보호 교외지역의 경제적 번영 등으로 구성. 프랑스의 국가도시정책의 경우에도 도시사회통합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사회통합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3) 보호지역을 통해 건강한 지역생태계의 회복

- 국제사회와 약속한 아이치 타겟의 달성을 위한 보호지역 설정 계획을 구체화해야 함. 또한 국립공원의 경우 모두 국제기준(IUCN 2등급 이상)에 부합토록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전을 통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과 공원관리를 차별화함.
- 백두대간·습지·하천·토양 및 생태가치와 효용을 상실한 도로와 연안을 복원하고,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보전 및 복원 확대를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을 세워야 함. 생물(유전)자원 정보관리 지원 및 신규 생물자원 발굴. 생물자원의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함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의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국립공원 등을 훼손할 수 없도록 통제가 필요함.

3. 정책제안

1)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 설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의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개발의 방아쇠가 될 것이며, 국립공원이 무너지면 다른 분야들에서의 각종 개발들도 난립하게 될 것임. 따라서 19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환노위와 교문위 위원의 요청으로 정부가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문화재 공동조사 실시 등이라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임, 변경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방안 검토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 수도권의 팽창과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광역차원의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외곽개발을 억제하고, 신규토지수요에 대해서는 지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지침을 수정 보완함.
- 수도권 녹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그린벨트의 보호, 도시 외곽지역 녹지와 농지에 대한 보전, 개발 사업 시 대체녹지 조성 의무화 등을 통해 수도권녹지총량제를 유지해야 함. 또한

그린벨트 실질적인 녹지로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주에 대한 지원이나 매입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 지역·계층 간 접근성 격차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자체의 학교·마을숲 조성, 옥상·벽면 녹화사업,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 자투리땅 녹화 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도시농업 등을 지원함

3)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과 관리의 강화

-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합의한 아이치 타겟(육상 17%, 해양 10%의 보호지역 지정)을 실행하기 위해 보호지역 확대 계획과 로드맵 작성 등을 구체화해야 함.
- 지역·권역별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핵심보전지역은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며, 연구·교육 및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사업만을 허용하는 절대보전구역(No Take Zone) 지정을 검토해야 함. 또한 국립공원 주변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백두대간과 주요 산지형 국립공원 정상부(종주능선)의 경우 탐방예약제 시행 등 민감한 지역의 보호대책을 마련함
- 백두대간·습지·하천·토양 및 생태가치와 효용을 상실한 도로·연안 복원하고, 부처별 중복 지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

IV.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현황과 문제점

1) 수자원 과잉 개발, 이제는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돌아 와

- 한국은 18,700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58,000km의 하천 3.5km마다 댐이 건설되어 있다는 의미임.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 숫자만도 1,300여 개에 달하는데, 이는 국토면적을 감안할 때 대형댐 밀도 세계 1위에 해당함. 제방도 약 40,000km에 달해, 전체 하천의 3/4 이상이 제방 안에 갇힌 상태. 수도관망은 16만km, 하수관거는 12만km. 정수시설은 하루 3,800만 톤으로 국민 모두에게 하루에 실제 사용량의 2배가 넘는 0.7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임.
- 한국의 물 관련 시설들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과잉 개발 상태임. 이미 90년대에 포화상태에 달했고 지속적인 개발은 불필요한 환경 파괴와 예산의 낭비로 갈등을 야기함. 평화의댐 건설, 동강댐 추진, 시화호 매립, 한탄강댐 등 논란이 됐던 시설들의 효용은 물론이고, 백해무익이라고 할 정도로 쓰임새가 없는 4대강 사업은 ‘통제되지 않는 개발’의 상징이라 할 만 함.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업이 끝나고 4년이 지나는데 지금 확인된 것은, 늘어난 시설만큼 늘어난 관리예산과 갈등임.

2) 브레이크 없는 하천 개발, 4대강 사업 평가와 대책도 없어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사업은 16개의 보(淤)를 건설하고, 5억 3천만m³의 모래를 준설했음. 이러한 하천 개조의 결과 하천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사막화됨. 2012년 여름을 기점으로 심각해진 녹조는 2015년부터는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심지어 겨울녹조가 관찰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금강과 낙동강에서는 60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강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문제의식이나 사태 해결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음. 오히려 ‘마지막 4대강사업’이라 불리는 영주댐, ‘제2의 4대강사업’이라 불리는 지천·지류 정비사업 그리고 친수구역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음.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공주보 하류 ~ 보령댐 도수로 공사비가 625억 원임을 감안하면, 10억 톤을 상류에 보내겠다는 정부계획에는 총 10조가 지출될 예정임. 고삐 풀린 개발에 대해 최소한의 제동 장치도 없으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용에 대한 이자비용도 매년 3,000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음.

3) 관료들의 독점한 물 정책, 시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물 관리

- 한국의 물정책은 국토부, 환경부 등 7개부서가 20개의 관련법과 23개의 법정 계획 하에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물정책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소통이나 조율을 위한 체계나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사업들이 중복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국토부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지난 해 여름 가뭄 발생 시 책임 부서도 없었고, 총괄부서도 없었음). 이 많은 법률들은 기형적인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하고 있음.

- 중앙 부처의 단편화된 행정은 시민들과 지자체가 필요한 현장의 조치 대신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유역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반복하고 있음. 수돗물 정수장의 경우 공급능력의 절반만 가동하고 있으며, 그나마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시민은 겨우 2%에 불과한 상황임.

4) 노후하고 기능을 잃은 댐들이 방치된 상황

- 전국에 건설된 댐들은 하천생태통로 차단, 수질악화, 수변 생물서식처 악화, 하천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들 중 50~150개가 매년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방식 변화, 대형저수지 축조나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토사퇴적 등의 이유로 철거되고 있음.
-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함. 미국에서는 댐이 하천생태계와 인간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2013년 한 해 동안만 51개, 총 1,150개의 댐을 철거함. 국내에서도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태화강, 곡릉천, 안양천 등에서 보(淤)를 철거한 사례가 있음.

2. 정책방향과 비전

1)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

- 4대강 사업은 무용지물의 효과, 계획과 추진 절차, 그리고 남겨진 이자와 관리 비용의 부담까지 모든 측면에서 최악의 사업임.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실패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정확한 평가를 다시 추진하고 이에 책임 있는 인사와 기관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함.
- 또한 4대강 사업과 똑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 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 물정책의 통합성, 일관성, 효율성 제고

- 한국의 물 정책이 중앙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나눠먹기를 억제하고, 정책의 통합성,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함. 이는 김대중 정부 즈음해 시작되어 20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물기본법을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음.

- 물 기본법은 개발 중심, 공급자 중심, 중앙부처 중심의 물정책을 관리, 소비자, 현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임. 물 기본법이 통해 중앙 정부의 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물정책의 원칙, 방향,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를 소통시키고 갈등을 조율하게 될 것임. 다른 한편으로는 유역과 현장 중심의 물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물정책과 주민에게 편의와 이익을 주는 정책을 가능하게 할 것임.

3) 노후하고 용도 없는 시설에 대한 정비

- 1970년대 전후의 댐 건설 시대가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하여 위험해지거나 용도가 없어진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농업용 보를 비롯해 4대강 보, 하구언 등 하천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물의 철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함.
- 하지만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 [농어촌정비법] 등은 댐의 해체 등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들을 정비해 관련한 규정과 절차 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

3. 정책 제안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 4대강 사업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관과 개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부여해야 함.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 매년 지원하는 4대강 사업비 이자 3,000여억 원 지출을 중단해야 함
-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천 개발, 4대강 용수 활용 계획 등은 경제성 부족, 환경영향의 부작용 등으로 정상적 절차를 거칠 경우 추진이 불가능함. 따라서 이들 사업을 기획하는 부처에 정상적인 행정절차(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명백히 잘못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인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
- 4대강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자체들의 막개발 난개발을 위한 근거로 이용되고 있음. 따라서 불필요한 특혜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위 법률의 폐지가 바람직함.

2) 수명지남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 댐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항들만 다루고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을 개정해 댐의 철거 관련 규정을 신설함. 이를 통해 절차, 감독기관, 복원 목표, 비용 부담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강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
- 또한 개정법에는 향후 댐 건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용기한 및 철거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댐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과 이를 심사하는 기구의 구성 등도 포함해야 함. 나아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고 있는 보(洑)를 목록화하고 연차별 철거방안을 마련해

야 함.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 물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물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물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하지만 중앙 부처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태이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물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를 조율하고, 지역별 유역위원회를 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채택 수준으로 추진함.
- 우선 각 부처 흩어진 기능을 통합해 중앙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나, 각 기능들이 각 부처들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이들을 모두 조정한 이후에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곤란함. 따라서 각 부처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물위원회를 뒤 정보의 취합과 소통, 물정책의 방향과 원칙 설정, 각 정책에 대한 평가, 갈등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 위원회에는 중앙 부처 등, 전문가, 지자체, 단체 등이 참여토록 하고, 민간이 위원장을 맡게 함.
- 유역별로도 지자체, 전문가, 지역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유역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하며, 유역위원회는 지역의 수요, 공급, 수질, 생태, 이용 등을 조율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토록 계획하고 관리하게 함.

V.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현황과 문제점

1)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증가

-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3년부터는 기상 및 국내외 영향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황사, 스모그 등 국외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국내 유입량 증가와 확산지연, 국내 산업시설과 차량운행 등이 주요한 원인. 오염물질 배출량이 단기적으로 줄지 않는다는 점,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미세먼지 농도별 현황은 공장과 차량운행이 많은 도시지역이 높고, 지역별·계절별·배출원별 특성에 따라 농도가 다름. 제철과 석유화학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강원, 전남, 충남지역을 비롯해 자동차 등 도로오염원과 항만 등 비도로 오염원이 많은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편서풍 영향이 큰 계절인 겨울과 봄에 영향이 큼.
- 최근 미세먼지와 질환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 등을 유발시키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됨. WHO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수가 2012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함. [대기오염에 따른 질환별 사망자 수/ 700만 명: 협심증 252만9,700명(36%), 뇌졸중 229만600명(33%), 만성폐쇄성폐질환 118만7,900명(17%), 급성폐질환 59만7,000명(8%), 폐암 44만3,100명(6%)]
- 특히, 초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의 경우 WHO가 정한 기준의 2.5배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 (WHO 연평균 권고기준 $10\mu\text{g}/\text{m}^3$, 한국 $25\mu\text{g}/\text{m}^3$)
- 결국,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각종 질환을 예방해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지켜 줄 뿐 아니라 진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원천적·근원적 감축을 위한 제도강화가 시급한 이유.
-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WHO 기준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WHO(한국) 권고기준 PM10 20(50) $\mu\text{g}/\text{m}^3$, PM2.5 10(25) $\mu\text{g}/\text{m}^3$, 연평균] 최근 수립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세먼지(PM10) $30\mu\text{g}/\text{m}^3$, 초미세먼지(PM2.5) $20\mu\text{g}/\text{m}^3$ 달성이라는 낮은 목표를 잡고 있는 [참고로, 서울시는 이보다 6년 빠른 2018년까지 미세먼지(PM10) $39\mu\text{g}/\text{m}^3$, 초미세먼지(PM2.5) $20\mu\text{g}/\text{m}^3$ 달성목표] 등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
- 전국적으로 대기측정망의 부족과 운영부실도 문제. 대기오염의 실태와 변화추이,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등을 파악해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비인 대기측정망이 전국 97개 시·군 총 506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함(전국기초단체 226곳 중 69곳에 대기측정망이 없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없는 경우도 있음. 대기측정망의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설치지역선정, 설치 시 기준높이의 적정성 등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함. 대기오염의 정확한 예측과 예·경보제 운영으로 사회혼란과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측정망의 정비 필요.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차원의 석탄화력발전소 추가증설계획과 경유택시의 도입.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26,273MW)가 운영 중이고 11기(9,764MW)가 건설 중인 심각한 상황. 이에 더해 7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 증설될 계획. 석탄발전량이 세계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음. 미국 내 석탄발전소는 2002년 633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 감소, 2020년까지 27% 이상이 줄어들 전망.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베이징 등 세 지역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함.
- 초미세먼지의 52%가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은 경유차가 67%를 차지함에도(휘발유차 12%, CNG 12%, LPG 9%)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 2029년까지 석탄발전량이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나고 경유택시가 도입되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 ※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의 46%차지.
- 우리나라는 1995년 미세먼지(PM10)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음. 대기환경기준의 정책적인 목표가 대기오염원을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있다면 제도를 강화하고 발생원별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가 큰 사업을 확대해야 함. 지역별 대기오염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수립, 지속적인 이행성과 모니터링도 중요.

2. 정책방향과 비전

- 1) 국내 미세먼지 정책목표 재설정으로 국민건강피해 최소화
- 2) 대기오염진단 및 대책수립을 위한 전국적 대기오염측정망 시스템구축
- 3)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지역별·배출원별 특성화된 대책수립
- 4) 국외 장거리오염원 감축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
- 5)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대기질 개선정책의 추진

3. 정책제안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개정

구분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
PM10	24시간 평균	50 $\mu\text{g}/\text{m}^3$ 이하	100 $\mu\text{g}/\text{m}^3$ 이하
	연 평균	20 $\mu\text{g}/\text{m}^3$ 이하	50 $\mu\text{g}/\text{m}^3$ 이하
PM2.5	24시간 평균	25 $\mu\text{g}/\text{m}^3$ 이하	50 $\mu\text{g}/\text{m}^3$ 이하
	연 평균	10 $\mu\text{g}/\text{m}^3$ 이하	25 $\mu\text{g}/\text{m}^3$ 이하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 경유차 운행제한 및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운행제한(LEZ) 제도개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에 의거, 수도권지역에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지정, 수도권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 현재 LEZ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계획 등이 부족,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LEZ 범위, 규제차량, 규제기준 등을 정비해 조기추진
- 경유택시도입재검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전면철회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경유택시를 배정, 매년 1만대씩 도입 예정. 서울과 대구시만 거부한 상태(2015년). 환경부장관이 '경유택시 도입 유보' 입장을 보였지만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님.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서울시 현황)

- 마을·관광·서울진입버스 중 경유차 57% 차지(11,073대 중 6,324대)
- 마을버스 경유차 27%(1,484대중 407대), 서울등록 관광버스 경유차 98%(4,192대 중 4,101대), 서울진입버스 경유차 34%(5,329대중 1,816대)
- 경유 마을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지속추진(CNG하이브리드 버스교체, PM-NOx저감장치부착 저공해차 교체)
- 경유 관광버스는 CNG로 교체
- 서울진입 수도권버스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3개시도 협력필요

-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한 관리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철회(재생가능에너지전환)

- 석탄화력 신규승인 금지 등 석탄소비총량감축을 위한 정책실행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감시 및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종합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수립

- 혼잡통행료 제도운영: 국내 서울 남산1, 3호터널에서 운영중인 혼잡통행료 제도 주요도시 적용검토, 교통유발요인감소와 주행거리감소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의 일환(ex 미국, 영국 등)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 법적근거 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도축법 제42조):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② 교통수요관리조치(도축법 제43조): 교통혼잡완화

: 도입배경 ① 대중교통 공급수준확대(대중교통전환 10%) ② 교통혼잡완화(교통량 15% 감축)

- 교통수요관리전략 효과평가를 통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현실화) :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마련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1990년에 시행된 이후 24년 동안 차량은 6배가 늘고, 물가는 3배가 인상됐지만 한번도 바뀌지 않음. 2015년 ‘2020년 단계적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
-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 대기오염측정망 적정수준으로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신설

○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 마련을 통한 위해성 관리강화

- 기상악화 시 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건강 피해 발생
- 건강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 예보시스템 도입
- 경보 시 차량운행제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경유차 도심진입금지 등 비상행동계획 법제화

VI.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현황과 문제점

1)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증가

-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3년부터는 기상 및 국내외 영향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황사, 스모그 등 국외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국내 유입량 증가와 확산지연, 국내 산업시설과 차량운행 등이 주요한 원인. 오염물질 배출량이 단기적으로 줄지 않는다는 점,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미세먼지 농도별 현황은 공장과 차량운행이 많은 도시지역이 높고, 지역별·계절별·배출원별 특성에 따라 농도가 다름. 제철과 석유화학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강원, 전남, 충남지역을 비롯해 자동차 등 도로오염원과 항만 등 비도로 오염원이 많은 서울, 경기, 인천, 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편서풍 영향이 큰 계절인 겨울과 봄에 영향이 큼.
- 최근 미세먼지와 질환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 등을 유발시키거나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등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됨. WHO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수가 2012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함. [대기오염에 따른 질환별 사망자 수/ 700만 명: 협심증 252만9700명(36%), 뇌졸중 229만600명(33%), 만성폐쇄성폐질환 118만7900명(17%), 급성폐질환 59만7000명(8%), 폐암 44만3100명(6%)]
- 특히, 초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의 경우 WHO가 정한 기준의 2.5배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 (WHO 연평균 권고기준 $10\mu\text{g}/\text{m}^3 \rightarrow$ 한국 $25\mu\text{g}/\text{m}^3$)
- 결국,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각종 질환을 예방해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지켜 줄 뿐 아니라 진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 생활환경의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원천적·근원적 감축을 위한 제도강화가 시급한 이유.
-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WHO 기준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WHO(한국) 권고기준 PM10 20(50) $\mu\text{g}/\text{m}^3$, PM2.5 10(25) $\mu\text{g}/\text{m}^3$, 연평균] 최근 수립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미세먼지(PM10) 30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PM2.5) 20 $\mu\text{g}/\text{m}^3$ 달성이라는 낮은 목표를 잡고 있는 [참고로, 서울시는 이보다 6년 빠른 2018년까지 미세먼지(PM10) 39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PM2.5) 20 $\mu\text{g}/\text{m}^3$ 달성목표] 등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
- 전국적으로 대기측정망의 부족과 운영부실도 문제. 대기오염의 실태와 변화추이,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등을 파악해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잡비인 대기측정망이 전국 97개 시·군 총506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함(전국기초단체 226곳 중 69곳에 대기측정망이 없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주민건강이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없는 경우도 있음. 대기측정망의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설치지역선정, 설치 시 기준높이의 적정성 등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함. 대기오염의 정확한 예측과 예경보제 운영으로 사회혼란과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측정망의 정비 필요.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차원의 석탄화력발전소 추가증설계획과 경유택시의 도입.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26,273MW)가 운영 중이고 11기(9,764MW)가 건설 중인 심각한 상황. 이에 더해 7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 증설될 계획. 석탄발전량이 세계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음. 미국 내 석탄발전소는 2002년 633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 감소, 2020년까지 27% 이상이 줄어들 전망.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베이징 등 세 지역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함.
- 초미세먼지의 52%가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은 경유차가 67%를 차지함에도(휘발유차 12%, CNG 12%, LPG 9%)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 2029년까지 석탄발전량이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나고 경유택시가 도입되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 ※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의 46%차지
- 우리나라는 1995년 미세먼지(PM10)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추가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음. 대기환경기준의 정책적인 목표가 대기오염원을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있다면 제도를 강화하고 발생원별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가 큰 사업을 확대해야 함. 지역별 대기오염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수립, 지속적인 이행성과 모니터링도 중요.

2. 정책방향과 비전

- 1) 국내 미세먼지 정책목표 재설정으로 국민건강피해 최소화
- 2) 대기오염진단 및 대책수립을 위한 전국적 대기오염측정망 시스템구축
- 3)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지역별·배출원별 특성화된 대책수립
- 4) 국외 장거리오염원 감축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
- 5)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대기질 개선정책의 추진

3. 정책제안

-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개정

구분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
PM10	24시간 평균	50 $\mu\text{g}/\text{m}^3$ 이하	100 $\mu\text{g}/\text{m}^3$ 이하
	연 평균	20 $\mu\text{g}/\text{m}^3$ 이하	50 $\mu\text{g}/\text{m}^3$ 이하
PM2.5	24시간 평균	25 $\mu\text{g}/\text{m}^3$ 이하	50 $\mu\text{g}/\text{m}^3$ 이하
	연 평균	10 $\mu\text{g}/\text{m}^3$ 이하	25 $\mu\text{g}/\text{m}^3$ 이하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 경유차 운행제한 및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운행제한(LEZ) 제도개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에 의거, 수도권지역에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지정, 수도권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 현재 LEZ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계획 등이 부족,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LEZ 범위, 규제차량, 규제기준 등을 정비해 조기추진
- 경유택시도입재검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전면철회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경유택시를 배정, 매년 1만대씩 도입 예정. 서울과 대구시만 거부한 상태(2015년). 환경부장관이 '경유택시 도입 유보' 입장을 보였지만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님.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서울시 현황)

- 마을·관광·서울진입버스 중 경유차 57% 차지(11,073대 중 6,324대)
 - 마을버스 경유차 27%(1,484대중 407대), 서울등록 관광버스 경유차 98%(4,192대 중 4,101대), 서울진입버스 경유차 34%(5,329대중 1,816대)
 - 경유 마을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지속추진(CNG하이브리드 버스교체, PM-NOx저감장치부착 저공해차 교체)
 - 경유 관광버스는 CNG로 교체
 - 서울진입 수도권버스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3개 시도 협력필요
-

-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한 관리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철회(재생가능에너지전환)

- 석탄화력 신규승인 금지 등 석탄소비총량감축을 위한 정책실행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감시 및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종합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수립

- 혼잡통행료 제도운영: 국내 서울 남산1, 3호터널에서 운영중인 혼잡통행료 제도 주요도시 적용검토, 교통유발요인감소와 주행거리감소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의 일환(ex 미국, 영국 등)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 법적근거 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도축법 제42조):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② 교통수요관리조치(도축법 제43조): 교통 혼잡 완화
- 도입배경 ① 대중교통 공급수준확대(대중교통전환 10%)
② 교통혼잡완화(교통량 15% 감축)

-
- 교통수요관리전략 효과평가를 통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현실화) :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마련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1990년에 시행된 이후 24년 동안 차량은 6배가 늘고, 물가는 3배가 뛰었지만 한번도 바뀌지 않음. 2015년 '2020년 단계적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
 -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 대기오염측정망 적정수준으로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신설
-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 마련을 통한 위해성 관리강화
- 기상악화 시 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건강 피해 발생
- 건강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 예보시스템 도입
- 경보 시 차량운행제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경유차 도심 진입 금지 등 비상행동계획 법제화

VII. 짝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현황과 문제점

1) 버려진 바다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해양 면적이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국가인데도, 수산자원개발, 항만개발, 연안개발 등 개발정책이 중심이고 바다생태계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임. 이는 생태계의 훼손과 종 다양성을 감소시킬 뿐더러, 수산업과 해양 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국가적 문제임.
-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는 1만4962.8km이며, 섬을 제외한 육지 부분의 해안선 7752.5km(52%)에서 인공 해안선은 3982.4km로 자연 해안선(3770.1km)보다 212.3km나 많음(국립해양조사원, '제1차 전국 해안선 조사'). 연안의 고밀도 이용개발(조선, 관광, 산단, 항만 및 어항 등)과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에 따라 자연해안, 갯벌, 천해, 산호초 등 서식지 훼손이 증가함.
- 전국 해역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II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반폐쇄성 해역(광양만, 함평연안 등)과 동해안 중부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수중생물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존산소(DO)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물 오염도 역시 증가함
- 주요 해양 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폐기물과 쓰레기, 갯벌오염, 방사성물질 오염, 유류오염,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등임. 이로 인해 적조, 빈산소화, 백화현상 등 바다가 사막화되고 있음.
- 부영양화물질인 총질소(TN)는 전남과 제주 지역에서, 총인(TP)는 전남과 동해영안에서 증가하는 경향. 한편 산업단지가 입지한 특별관리해역(부산, 울산, 온산, 시화, 마산)에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함.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이 생물체 내에서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하여 농축되어 생태계 및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폐그물, 어구 등 '바다 쓰레기(Marine litter)'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고, 선박운항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스티로폼부이, 비밀봉지, 플라스틱 조각, 나일론 노끈 등 양식장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

2) 갇힌 갯벌

- 연안습지(갯벌)의 면적은 1987년 3,203km²에서 2013년 2,487km²로 716km² 감소(여의도 240배)했으며, 신도시 및 항만, 산업단지 개발, 해안도로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이후 갯벌 개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서 개발 속도가 줄어 들었으나, 최근 들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정부의 규제완화가 강행되면서 인천, 거제, 여수 등에서 대규모 해안 매립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 의무화 등에 따라 가로림만, 강화도 등의 조력발전소 계획으로 갯벌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3) 새만금, 화성호 등 드러나는 개발 실패

- 새만금 간척사업은 33km의 방조제를 건설해 확보한 40,100ha를 매립해 토지와 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호를 개발하는 계획임. 하지만 개발도 늦어질뿐더러 용수의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해 토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2011년 3월 발표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서 수질 목표를 중.상류(농업용지) 4급수, 하류(도시용지) 3급수로 천명했으나, 2015년 10월 중간평가 결과 평균 5급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6급수 수준에 이르고 있음.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서도 목표 수질 달성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당초의 계획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화옹지구 간척 사업'은 9.81km의 방조제를 건설해 6,212ha를 매립해 1,730ha의 담수호(화성호) 등을 조성하는 계획임. 1991년 9월 시작해 2002년 3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목표 수질(호소 수질 IV등급) 확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배수 갑문을 이용한 해수 유통 실시하고 있음. 또한 화성호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해 시화간척지 남서부에 위치한 대송 농경단지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우도수로 공사를 강행 중임. 하지만 2016년 현재 여전히 목표 수질 달성은 요원하며, 추진 중인 간척지 이용계획을 현실화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임.
- 선행 사업인 시화호의 경우 결국은 담수호 계획을 포기하고, 북측 시흥공단에 연접해서는 MTV(Multi Techno Velly)를 개발했고, 남동측엔 송산그린시티 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담수호를 포기한 대신 조력발전소를 설치해 해수 유통을 항구화함. 시화호의 사례는 실패한 정책의 전환을 통해 최소한의 환경을 보호하고 합리성을 반영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2. 정책방향과 비전

1) 바다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 관광 활성화

- 국제사회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각 국 해양 면적의 10%로 확대하겠다는 생물다양성 협약 아이치 타깃에 합의하였음. 한국의 환경운동은 매년 1000만 톤에 이르던 해양투기의 금지시키고, 서울대공원에서 있던 재돌이를 방류하는 등 성과를 낸 것은 국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때문임.
-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개선과 복원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며, 이를 위해 지표인 위기 종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임.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고래류와 물범류 등을 위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바다를 인간만이

사용하는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소중한 지구생태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함

2) 갯벌 보호법의 제정 및 갯벌 국립공원 추진

-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을 둘러싼 갈등 이후, 정부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을 취소하는 등 갯벌의 보전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전환하였음. 이는 갯벌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인식의 결과이므로, 지금 갯벌 매립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개발 사업들에 제동이 걸려야 하며,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이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나 갯벌의 국립공원 지정 등을 추진해야 함.

3) 실패한 간척지의 해수 유통으로 수질개선과 지역개발 균형 추진

- 새만금호와 화성호 등 간척지의 대규모 담수호 개발 계획은 목표 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상황이므로 하루 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호수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해수 유통은 불가피하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간척 선진국들도 해수유통 방식으로 기수역을 관리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체되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간척지 일부 지역에 대한 집중 개발을 합의하는 것이 방향이 될 수 있음

3. 정책제안

1) 바다의 위기종 보호 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 수산물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붕괴되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각종 개발을 제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해양 보호구역 설정 등을 추진해야 함
- 특히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이들을 위한 생태보전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기능할 것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고래 보호구역(동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제주), 점박이물범 보호구역(인천 및 경기)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보호구역에서는 이들 위기종에 대한 포획을 금지하고, 시중에서는 혼획 등에 의해 획득된 사체에 대한 유통을 차단하며, 지역에서는 생태관광 등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정부가 법제를 만들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그물에 걸린 혼획 고래를 살려주는 등의 경우 소요된 비용과 격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2) 갯벌 보호법 제정과 갯벌국립공원 지정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갯벌 보호 흐름을 역행하는 인천, 거제 등에서의 매립과 가로림만과 강화갯벌 등에서 진행 중인 조력발전의 추진도 중단되어야 함.
- 갯벌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역간척 지원법)을 지원하는 등이 필요함
- 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검토하고 지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립공원은 산악형과 해상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데도 바람직함.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 현재의 새만금 내부개발은 담수호를 전제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당장 다양한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농업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의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에 수질개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뒤늦게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새만금 사업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담수호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하고, 농·공업용수의 확보방안, 방수제의 축조방법과 매립토의 높이, 생태·환경용지의 조성방향, 국립수목원의 조성방안, 도시용지의 기반시설 조성방안 등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함. 지난 12월 제출된 새만금 중간평가 용역 보고서를 둘러싸고도 수질변화 예측모니터링이 타당한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
- 따라서 더 이상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 용역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회,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용역보고서를 검증하고, 국회 차원에서 새만금 플랜B(해수유통을 통한 부분 조기개발) 수립에 나서야 함.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의 포기하고 해수 유통을 항구화 한다면,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으로 조력 발전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개발과 일부 갯벌 보호를 통한 서해 생태계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화성호도 지속적인 해수 유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역간척에 대한 비전과 친환경적 부지 이용 방안을 지역사회가 공유해 나가야 함. 일부를 논밭으로 활용하되, 7·8공구를 인공습지로 활용하고, 화옹방조제 앞 매항이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 관광 자원화하는 등 새로운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매항리 갯벌은 수만 마리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기수역 습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람사르 사이트로서의 가치도 충분한 상태임.

■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결과 발표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평의는 오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반환경적인 발언을 확인해 19대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한다.

7대 정책과제 중 원전분야, 4대강분야, 국토생태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각 분야별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속기록 전체를 검토했다. 원전분야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 키워드로 1,780건이 검색되었고, 4대강분야에서 '4대강' 키워드로 1,215건이 검색되었으며, 국토생태분야에서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등의 키워드로 2,620건이 검색되었다. 각 건 수는 키워드가 발견된 속기록의 횟수로 속기록은 한 건당 백여 쪽 안팎의 분량이다. 국토생태분야는 특별히 대표적인 반환경법안 공동발의자도 추가했다. 20여명의 활동가와 자원봉사자가 3주에 걸쳐서 속기록을 검토했으며 검토 결과를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을 했다.

국회 속기록 검토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에 23명(새누리당 19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되었는데 중복을 제외하면 총 68명(새누리당 58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이다.

그 중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발의 등을 고려해 '반환경 국회의원'을 선정했는데 총 17명이다.

원전분야는 원전확대, 원전홍보, 원전수출, 핵무장 등의 발언유형으로 구분했다. 원전분야에서는 총 7명이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는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이다.

4대강분야는 후속사업 요구, 4대강 성과 왜곡, 수자원공사 지원요구, 기타 담합기업 처벌조치 완화 요구 등의 발언유형으로 구분했다. 4대강분야에서는 총 7명이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는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경기 시흥시)이다.

국토생태분야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그린벨트 개발 요구,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찬성과 국립공원 막개발 법 대표발의 등으로 기준을 적용했다. 국토생태분야에서는 총 3명이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이다.

한편, 세 분야 모두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 중에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김한표 의원은 여러 회의에서 원전 홍보와 확대를 주장했는데 “왜 정부에서는 반핵단체들만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고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고 친핵이나 찬핵단체는 왜 그렇게 방관하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좀 지원하세요, 지원”이라거나 “원전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발언했다.

정수성 의원은 발언 횟수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원전 확대와 홍보에 있어서 단연히 돋보이는 국회의원이었다. “저는 하여튼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고 발언했다.

이강후 의원은 원전 홍보와 확대에 원전수출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면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세계 각국이 다 시금 원전으로 유턴하거나 확대하는 이유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고”라고 사실 인식에 오류가 있는 발언을 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에서 “지금 우리가 발전원별로 믹싱을 할 때 원전은 장기적으로 발전 비중을 늘려가는데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계획 중인 원전 건설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라고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등 여러 회의에서 원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김동완 의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며 적극적인 원전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라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4대강분야의 반환경 국회의원들 중에는 발언횟수로 보나 발언유형 중복이나 내용으로 보나 이

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라고 발언했다.

이장우 의원은 이노근 의원과 함께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한 국회의원들인데 발언내용도 저급하다. “이노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국가하천 한강 그거 회수하세요, 서울시한테. 완전 좌파들 말이지요, 나라 잘되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런 소수의 몇 명 때문에 국책사업이 흔들리고 국민이 낸 혈세가 낭비 되고. 이거 되겠어요?”라고 발언했다.

이완영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신하는 국회의원으로 “4대강 사업이 아무효과가 없다고 입증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아무 효과 없다 라고 입증된 보고서는 아무 것도 없지요”라고 4대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질오염 등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했다.

함진규 의원은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 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일한 야당 소속의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민홍철 의원은 “물론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수공에게 어떤 특별 우선권을 줬지만, 그 자체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누누이 ‘자구노력 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친수구역법을 보더라도 에코델타 같은 신도시 18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친수구역법으로 수자원공사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조의 발언을 했다.

국토생태분야의 반환경 국회의원인 속기록 검토와 국토 난개발 악법 발의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사로 선정되었다.

그 중 이우현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 최다 횟수를 기록하며 “이제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된다. 수도권의 청년 실업률이 제일 높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자연녹지 안에서 행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습니다.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면적도 늘려야 되고 또 지금 용적률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등 자연녹지 개발을 위해 집요하게 발언했다.

황영철 의원은 국립공원 개발 등을 포함해 산악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청부입법인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다.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한편,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 19대 국회 [원전 분야] 검증 결과

1. 개요

- 19대 국회 회의록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 키워드를 통해 국회의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입장을 검토
- [국회 정보 시스템](#) 회의록 총 검색건수: 1,780건
- ‘원전’ 키워드(총 746건), ‘원자력’ 키워드(총 805건), ‘핵무장’ 키워드(총 229건)

2. 검토 결과

- 총 25명 의원의 원전 정책과 핵무장을 옹호하는 52건의 발언 내용을 확인. 이중 22명은 새누리당 소속의원이고 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 반환경 국회의원은 발언횟수와 발언유형 중복으로 김동완 의원(원전 확대, 핵무장), 김상훈 의원(원전 확대, 원전 홍보), 김한표 의원(원전 확대, 원전 홍보), 이강후 의원(원전 확대, 원전 수출, 원전 홍보), 이채익 의원(원전 확대, 원전 홍보), 정수성 의원(원전 확대, 원전 홍보), 조원진 의원(원전 확대, 원전 수출) 등 7명이 선정됨.

3. 발언 유형

- 원전 확대 찬성: 해외 원전 수출 독려
- 원전 수출 찬성: 원전의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불가피성 옹호
- 원자력 홍보 강화: 원자력문화재단 예산 증액 등
- 핵무장 안보론: 핵무기 확보, 핵잠수함 확보 등

4. 주요 국회의원의 발언 사례 (※전체 기록은 엑셀 파일 참조)

(1) 원전 확대에 대한 옹호: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 김동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17일)
- 이강후 “원전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본회의, 2015년 06월 22일)
- 이강후 “후쿠시마 사태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세계 각국이 다시금 원전으로 유턴하거나 확대하는 이유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석탄의 99분의 1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며 또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경제적이기 때문” (본회의, 2013년4월26일)

- 김상훈 “지금 우리가 발전원별로 믹싱을 할 때 원전은 장기적으로 발전 비중을 늘려가는데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계획 중인 원전 건설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것은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위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2014년 12월 30일)
- 이한구 “원전 수출 (···)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 (본회의, 2013년 2월 5일)
- 김상훈 “원전을 대체 할 수 있을 만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발견된 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물론 그때는 당연히 그런 대체발전원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본회의, 2014년 06월 19일)
- 조원진 “국민들한테 ‘원전 다 폐기하고 5.6.7. 8호기 다 폐기하고 신월성 3.4호기 다 건설 중단해 버리면 전기요금이 3배 오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 2012년 11월 07일)
- 조원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 2012년 11월 07일)
- 이채익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정부가 약속하고 또 울산시민이 그토록 협조한 사업을, 또 거기 부대적으로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을 올 해 초에 착공해서 부지 보상하고 모든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반회계와 같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부하는 이 특별지원금이 왜 예산 편성이 안되었는지, 이것은 산업부의 직무 유기와 기획재정부의 몰이해가 결합된 일” (산업통상자원위, 2015년 10월 19일)

(2) 원자력 홍보 옹호: 원자력문화재단과 한수원 홍보 강화

- 권성동 “(원자력 홍보예산 26억 삭감 의견에 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중략 ... 23기 정도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안전성이라 할까 또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는 사업은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등소위원회, 2012년 11월 25일)
- 정수성 “2011년도의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에 대한 홍보 예산이 지금 반으로 깎였어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 놓고 ‘원자력 사업을 잘 하겠다’, 그것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년 10월 19일)

- 김한표 “국민들한테 대홍보 강화 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별 문제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한 수원이 앞장서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산업통상자원위 제8차, 2015년 7월 3일)

(3) 핵무장론

- 정몽준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의 교훈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핵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본회의, 2013년 11월 20일)
- 김종태 “만약 앞으로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두둔한 다고 하면 일본 등 주변국들 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핵 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 2013년 06월 11일)
- 이노근 “일반 민간단체나 학술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저는 핵주권을 찾아오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 (본회의, 2013년 02월 14일)
- 김을동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최소한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 제309회 - 제6차, 2012년 07월 19일)
- 홍일표 “현재까지의 논리는 우리 가 주장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여기서 말 하는 핵재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엘런 타우셔라는 국무부 군축.안 보 차관 이 바로 이 비핵화 선언을 근거로 못 고쳐 주겠다 이런 의견 을 제시해서 지금 우리하고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좀 더 잘 개발하고 설득해야 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3년 2월 20일)
- 김동완 “우리는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것 자체가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핵문제에 있어서는 불균형 상태로 가게 되고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산업통상자원위,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2014년 12월 3일)
- 송영근 “해군이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2015년 9월 22일)

<19대 국회의원 원전 관련 유형별 발언 기록>

이름	정당	지역구	유형별 발언 기록				
			원전 확대	원전 수출	원전 홍보	핵무장	중복 횟수
강창희	새누리당	대전 중구		0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0		1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0			0	2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 서구	0		0		2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0	1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				0	1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0		0		2
박대동	새누리당	울산북구	0				1
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0	1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0			1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0			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0	0	0		3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0	1
이병석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		0			1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0		1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0		0		2
이한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0			1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시			0		1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0	1
정문헌	새누리당	속초시고성군양양군				0	1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0			1
정수성	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0		0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0	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0	0			2
홍일표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0				1

■ 19대 국회 [4대강 분야] 검증 결과

1. 개요

- 19대 국회 회의록에서 '4대강'의 키워드를 통해 국회의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입장을 평가
-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총 검색건수: 1,215건

2. 검토 결과

- **총 59건의 발언을 정리한 결과 31명 의원의 4대강사업 관련 문제발언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8명은 새누리당, 2명은 더불어민주당, 1명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후속사업 요구가 17건, 성과왜곡이 13건, 수공지원 및 아라뱃길 지원 요구가 9건, 기타 담합기업 규제 완화 요구 등이 6건으로 나타남.
- 반환경 국회의원은 발언횟수, 발언유형 중복 등으로 권성동 의원(성과 왜곡, 감사결과 문제 제기), 민홍철 의원(후속사업 요구, 수자원공사 지원 요구), 이노근 의원(후속사업 요구, 성과 왜곡, 수자원공사 지원 요구), 이완영 의원(후속사업 요구, 성과 왜곡, 수자원공사 지원 요구), 이장우 의원(후속사업 요구, 수자원공사 지원 요구, 4대강사업 정당화), 이학재 의원(후속사업 요구, 수자원공사 지원 요구), 함진규 의원(후속사업 요구, 담합기업 처벌조치 완화 요구) 등 7명이 선정되었다.

3. 발언 유형

- 후속사업 요구 : 친수구역, 도수로 공사, 지천/지류 사업, 태국사업 등
- 성과 왜곡 : 홍수나 가뭄피해 감소
- 수자원공사 부채/이자 국비 지원 요구/아라뱃길 지원요구
- 기타 : 담합기업 처벌조치 완화요구, 감사결과 문제제기 등

4. 주요 국회의원의 발언 사례 (*전체 기록은 엑셀 파일 참조)

(1) 후속사업요구

- 이종배 “4대강 사업으로 이왕 만들어 놓은 16개 보에 우리가 7억 2000만t 더 여유수량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놔는데 이런 수량을 이렇게 보면서도 가뭄으로 고생하는 농민들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11개 다기능 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곳이 20개 지구입니다. 20개 지구인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국토부에서 이에 대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에서 이런 농업용수뿐만 아니고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 이런 문제관련해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재난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비해

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오랫동안 가뭄이 심한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예타를 면제해 줘서라도 시급히 시행해야할 곳은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9대국회 제33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 10월 30일)

- 조해진 “한동안은 이 4대강을 왜 한꺼번에 했나, 하나만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4대강할 때 왜 섬진강까지도 못했느냐, 그 지류.지천까지 왜 못했느냐, 그리고 저수지.소류지 같은 데를 준설하고 둑 높여 가지고 저수량을 왜 더 못 확보했느냐, 중.소형 댐 그때 왜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 확보 못 했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리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기후 변화, 기상이변이 계속 심해질 거고 기상청은 이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끝나고 내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지금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미뤄 뒀던, 4대강 논란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미뤄졌던 지류.지천 정비하는 거, 또 저수지와 소류지 준설하고 둑 높이 고쳐 수 용량 넓히고 중.소형 댐 만드는 거, 이 일을 빨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긴급하게는 4대강의 넘치는 물을 빨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뭄 지역에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게 하는 이수사업을 빨리 저는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19대국회 제337회 제6차 국회본회의(2015년 10월 13일)

(2) 성과왜곡

- 이완영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내 귀를 의심해요. 4대강 사업이 아무 효과가 없다 라고 입증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아무 효과 없다라고 입증된 보고서는 아무 것도 없지요, 우리 세 분 교수님? 그런 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번 가뭄 같으면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낙동강을 사람이 발 정도만 물이 있어 가지고 그냥 건너갈 정도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경지에 물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는 주민들의 감사 의 표현을 들었는데”

2015년도 국감-국토교통위원회(2015년9월11일)

- 조원진 ““지금 4대강주변에 한 1000만 명 이분들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얘기했지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쨌든 홍수, 가뭄 막아 주고 찰는데 이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 부풀어 있어요. 특히 부산은 선도 프로젝트, 대구도 이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영똥 한소리를 하니까 기가 막혀요. 저는 이정부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다음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것 같아요? 정권 바뀌는 것은 요원하니까 소신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국회 제3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11월 04일)

(3) 수공지원/아라뱃길지원

- 민홍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보를 설치하고 건설한 비용으로 8조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했는데, 시설을 완공했으면 기부채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지요? 그 시설사업의 대가로 지금 8조 원의 부채를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부채납의 조건이 뭐냐 이거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수공이 채무를 부담하고 국가가 보증을 선거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또 기부채납도 했으면, 채무이행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사소송이라도 제기 해야지요.”
2014년도국감-국토교통위원회(2014년10월14일)

- 이노근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아라뱃길의 이용문제, 활성화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선 첫째, 저는 아라 뱃길 여객선 운항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환경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협상할 필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게 국가하천입니다. 왜 박원순 시장이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다 맡겨 가지고 이렇게 갑과 을이 바뀔니까? 회수하라고 해요, 회수! 국토부! 나오세요. 왜 저 한강을 전부 서울시에 다 맡겨 가지고 국토부가, 나라가 말이야 지방정부한테 일일이 가서 고개 숙이고 거기 가서 ‘승인해 줘’ ‘승인 해 줘’ 합니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하면 그래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맡기고 말이야”
2015년도국감-국토교통위원회(2015년9월21일)

- 이학재 “(수자원공사)사장님, 경인 아라뱃길에 지금 배가 2개 노선이 다니는데…… 아니, 다녔었지요. 4월까지 130t급 200인승짜리 우바호가 있었고 현 재는 연안부두에 서 인천, 김포까지 다니는 현대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KDI 예측 대비해서 지금 19.4%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나요?...지금 사장 님 말씀대로 한강에 선 착장이 없어 갖고, 서울시민들 이 서해 바다로 올 수 있는 그 길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서울시의 한강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하고 지금 수공에 서 추진하는 한강-아라뱃 길-서해 유람선 이 두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만 있으면시너지 효과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민도 친수공간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서울.인천.경기 지역경제도 활성화 화가될 수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지 모 르겠습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2015년도국감-국토교통위원회(2015년9월21일)

- 기타

- 권성동 “이번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서 총장을 비롯한 감사팀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원 직원들한테 물으 면 아마 과반 수 이상이 이 번 감사 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라고 대답할 것 입니다. 오히려 감사원 을 정치의 한 소용돌이, 한 복판에 몰아세웠다. 감사원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라고 이야기할겁니다. 왜 한쪽측면만 보고 다른 쪽 측면은 보지 못합니까? 판단을

할 때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 유리한 자료만 짜깁기해서, 편집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것 누가 승복을 하겠어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최고 국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감사원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2013년도국감-법제사법위원회(2013년10월15일)

- 이장우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국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다 보니까 일부 무리가 있었다,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천이나 지류 개선을 우선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 데 4대강을 일시에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지요? ... 만약에 4대강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또 같아엎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나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까? 그러다보니까 4대강 사업은 결국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국감-국토해양위원회(2012년10월12일)

- 함진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담합 혐의로 인해서 말이지요, 국내 100대 건설사 중에서 상위 60개 사가 공정위와 발주처로부터 담합과 관련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59개 사가 1조 2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들이 발주 기관으로부터는 약 60개 사가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습시다....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의 이런 담합에 따른 제재가……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 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지난 1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예방을 위한종합방안을 마련하시고, 총리님 되시기전에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 중요한 거는 그 해당 국가에 서 입찰을 받기 위해서 제한 없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국내 제재 규정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업오너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게 맞는데 기업의 국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좀 완화해서, 정책적 제한을 좀 완화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참고로 2006년 참여 정부에서도 행정 제재처분 해제 특별조치를 해서 기업에 대한사면을 단행한 바가 있거든요.”

제19대국회 제331회 제5차 국회본회의(2015년 02월 25일)

<19대 국회의원 4대강 관련 유형별 발언 기록>

	정당	지역구	유형별 발언 기록				
			후속사업	성과왜곡	수공지원	기타	중복횟수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0		0	2
김기선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갑	0				1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0				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0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0			0	2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0			1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0				1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0		0		2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0			1
송광호	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			0		1
신상진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0				1
안덕수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0	1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 동구	0				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0				1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0	0	0		3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0	0	0		3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0				1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0		0	0	3
이재균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0			1
이종배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0				1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시		0			1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0		0		2
이현승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을		0			1
임내현	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0		1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0		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0			1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0				1
조현룡	새누리당	경남 함안 합천 의령군		0		0	2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0		0	0	3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0				1

■ 19대 국회 [국토생태분야] 검증 결과

1. 개요

- 19대 국회 회의록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규제완화’, ‘그린’, ‘그린벨트’, ‘GB’, ‘케이블카’, ‘삭도’ 등의 키워드를 통해 국회의원의 발언을 확인하고 입장을 평가
-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총 검색건수: 총 2,620건
1,914건(규제완화), 641건(그린벨트, GB), 65건(케이블카, 삭도)
-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으로의 법적 근거로서, 보호지역을 위협하는 개발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

2. 검토 결과

- **총 23명 의원의 문제발언자와 악법 발의자가 확인됨.** 이 중 19명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고 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반환경 국회의원은 발언횟수, 발언유형 중복, 법안 대표발의 기준으로 이우현 의원(최다빈도 발언), 김성태 의원(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발의), 황영철 의원(법안 대표발의) 등 3명이 선정.

3. 발언 유형

- 수도권입지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보고 철폐를 주장한 경우
- 수도권규제 완화를 제도적으로 요청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도시개발 찬성
-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만으로 잘못이해하거나 획일적인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 국립공원내 신규 케이블카 허용에 찬성
- 설악산케이블카 찬성 및 사업 인허가 전 예산 조기 집행 촉구
-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막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산악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청부입법

4. 주요 국회의원의 발언 사례 (※전체 기록은 엑셀 파일 참조)

(1) 수도권입지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보고 철폐를 주장.

- 이만우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또 수도권 입지규제, 과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과도한 환경규제 등 덩어리 규제가 혁파되어야만 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본회의, 2014년 06월 19일)
- 김성태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국토교통위원회, 2015년 02월 10일)

- 이현재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잔가지만 치고 덩어리 규제를 풀지 못하니까 이렇게 업계에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덩어리 규제를 풀어 나가는 것, 이것을 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본회의, 2015년 10월 15일)

(2) 수도권규제 완화를 제도적으로 요청한 경우

- 이우현 “수도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된다. 수도권의 청년 실업률이 제일 높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의 자연녹지 안에서 행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습니다.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면적도 늘려야 되고 또 지금 용적률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8일)
- 노철래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와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산업시설 입지에 따른 오수 및 폐수 관리가 전혀 문제없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보전권역 중에서 상수원보호지역과 수변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본회의, 2015년 10월 16일)
- 정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자연보전권역을 확대 허용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예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1월 01일)

(3)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도시개발 찬성

- 윤호중 “이것이 구리시 토평동 일원의 약 24만 4000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곳에 외국으로부터 디자인기업을 약 2000여개 유치하고 또 연간 30회 정도의 건축디자인과 관련된 컨벤션을 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약 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100억 불, 그러니까 한 12조 정도가 되겠지요.”(상임위원회, 2015년 1월11일)

(4)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만 잘못 이해하거나, 획일적인 해제를 주장한 경우

- 이완영 “그린벨트 내에 실제로 그린 땅, 푸른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2015년 2월 10일)

- 이노근 “그런데 이런 지역은 보면 데드벨 트거든. 일선에서 데드벨트라고 그래요, 블랙벨트. 이미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 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장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해주는 게 맞지....” (소위원회, 2013년 2월 27일)

(5) 국립공원내 신규 케이블카 허용

- 우윤근 “‘삭도 산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양쪽 지사가 다해요. 저도 들어 봤는데 충분히 일 리가 있다. 자동차 도로가 올라가는데 훨씬 더 그것이 공해가 심하고 자연 오염이 심하다, 그래서 삭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개 할 수는 없고 영호남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는 게 좋겠다, 세 이게 양지사 얘기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충분히 일 리 있다고 보는데요.” (2014년12월24일)

(6)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찬성 및 예산 촉구

-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염동열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 요구
 -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높고, 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
- 권성동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

(7)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

- 본 법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구지정 후 산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산림복지서비스)로 대통령이 정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제2조 정의) 총 29개의 보전지역 인·허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을 의제처리하고, 환경영향평가 축소 실시는 물론, 절대보호지역 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은 물론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도 없이 기업에게 개발특혜를 주는 악법이다.
- 본 법은 산악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청부입법 이었으며, 비록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었으나 정부입법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으로 일부 수정되어 재추진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국토생태 관련 유형별 발언 기록>

이름	정당	지역구	유형별 발언 기록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케이블카	법	중복횟수
강은희	새누리당	현여성가족부 장관/비례대표				0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0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0			0	2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0	1
김정록	새누리당	비례대표				0	1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 춘천				0	1
노철래	새누리당	경기 광주	0				1
박덕흠	새누리당	충북보은옥천영동				0	1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0		1
손인춘	새누리당	비례대표				0	1
영동열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0		1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			0		1
유승우	무소속	경기이천				0	1
윤명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0	1
윤재옥	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				0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0			1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0			1
이만우	새누리당	비례대표	0				1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0			1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0				1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	0				1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0				1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				0	1